

\* 최근 환경 현안 브리핑 -정리 및 발제: 이현정

## 1. 탈핵 & 송전탑건설 저지-삼척, 영월, 부산, 경주, 밀양, 여수, 경기



[그림 1] 국내 원전 운영/건설 현황

### 1-1. 신규핵발전소 건설 저지 -삼척, 영덕

#### ■ 삼척

- 2014년 9월 주민투표 -84.9% 반대(투표율 67.6%)
-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기구 주도로 실시. 그러므로 법적 효력은 없음
- 삼척시장, 정부에 백지화 요구 약속 -정부도 영덕으로 선회

#### ■ 영덕

- 정부 -건설 반대가 심한 삼척지역을 포기
- 삼척-2기, 영덕-2기의 계획을 수정하여 영덕에 4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 수립 결과에 포함
-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최종계획안 발표 예정
- 영덕군의회 원전특위 2015년 4월 8-9일 여론조사 실시(성인남녀 1,500명)
- 핵발전소 건설 반대 58.8%, 찬성 35.7%,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 65.7%

### 1-2. 노후 핵발전소 폐쇄 -고리(부산), 월성(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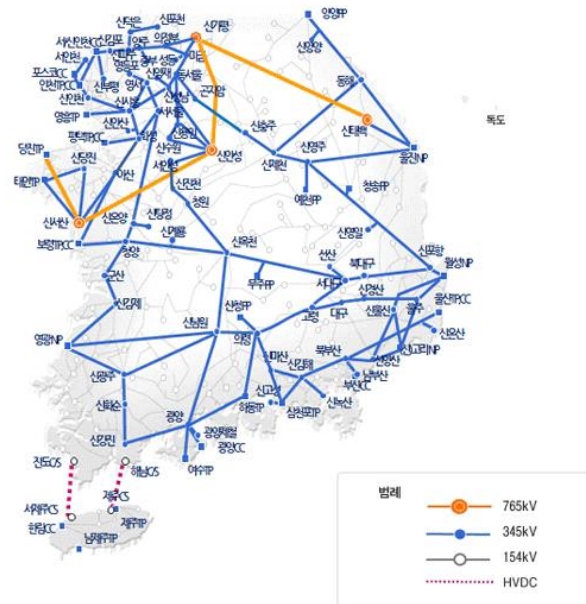
#### ■ 월성 1호기

- 2015년 2월 26일 재가동 승인
-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국민소송인단 모집중(4월말)

#### ■ 고리 1호기

- 2007년 6월 9일 30년 설계수명 만료-가동중단
- 10년 연장 결정 후 2008년 1월 재가동
- 고장과 재가동 반복

### 1-3. 송전탑 건설 저지투쟁 -밀양, 여수, 경기



[그림 2] 전력계통도(2013년 1월 기준, 전력거래소)

#### ■ 밀양/청도

- 신고리~북경남 송전선(총연장 90.5km로 예정)의 제2구간으로, 송전선은 완공 이후 울산 신고리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로 수송하는 역할
- 무리한 강행에는 UAE에의 원전 수출 관련 패널티때문
- 2014년 6월 11일 행정대집행 - 9월 완공 -12월 28일 송전 시운전
- 신고리 3호기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운영허가의 거둬되는 연기 등으로 송전탑의 상업 운전 시기도 연기
- 송전탑은 세워졌지만, 고압송전 저지를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

#### ■ 여수 봉두마을

- 기존 19기 존재
- 울촌 산단변전소-여수산단 개폐소 사이의 20 km 신설구간에 45기 설치, 그 중 6기가 봉두마을
- 2014년 8월 11일 한전-마을대표 5인 합의
- 한전이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는데 9억 3천 6백만원 지원하고 송전탑 공사는 재개하는 것으로 정리

#### ■ 경기(양평, 여주, 광주, 이천)

- 신경기변전소(신울진-수도권) 건설 후보지 5개마을 선정
- 신경기변전소는 부지 면적 8만8천㎡에 765kV 주변압기, 755kV·345kV급 송전선로, 송전철탑 170여기 등으로 구성



[그림 3] 한전의 설명에 따라 유추해본 송전선로  
가상도(양평시민의 소리, 2013년 8월 22일자)

- 제2의 밀양사태 우려
- 당초 2014년 9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예비후보지 5곳 중 1곳 확정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대로 인해 입지선정절차 잠정 중단
- 2015년 1월 20일 '신울진-신경기 765kV 송전선로 및 신경기변전소 백지화 종교·시민 사회·지역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 경기도는 한전에 세 가지 요구. 첫째, 경주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방폐장)'처럼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으로 변경 할 것, 둘째,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를 대통령령 등으로 법제화할 것,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줄 것
- 또한, 변전소 건립과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도내에 자립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중
- 한전 관계자는 "공모방식과 법제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면서 "올 상반기 입지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힘

#### 1-4.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2013년 설치)
- 시민사회단체의 불참선언, 반복적이고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옴
- 2014년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잡았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4개 핵발전소 인접지역에서 지역대학들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나섬
- 논의 내용 감시 및 근본적인 문제제기 필요

## 2. 산지보전-가리왕산, 설악산케이블카, 풍력발전, 산지관광특구법

### 2-1. 평창동계올림픽 건설부지 -가리왕산

####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스키 경기장 개요



[그림 4] 가리왕산 중봉 알파인 활강 경기장

#### ■ 문제점

- 벌목 규모 -약 5만 8천여 그루 벌목 예정. 2015년 1월 기준 30% 진행
- 슬로프의 상당부분이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이며 지정유형은 희귀식물 자생지-올림픽을 위해 지정 해재
- 수목 이식 후 생존 가능성 희박
-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나가노 올림픽

#### ■ 대안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

- IOC 입장 “한국 정부가 결단하면 진행”
- 2014년 12월 9일-IOC 총회에서 ‘아젠다 2020’ 법안이 통과, 국가 간의 분산 개최까지도 허용하는 법안
- 분산개최 거론지역 -국내 무주, 일본 나가노, 북한 마식령 등

### 2-2. 설악산 케이블카와 산지관광 특구법

#### ■ 오색-끝청 구간 케이블카 신설 계획



[그림 5] 설악산 '친환경' 케이블카 노선(한국경제, 2015년 1월 28일자)

- 예산: 약 450억원
- 1970년 설치돼 현재 운행 중인 설악케이블카(속초시 설악동 소공원~권금성 전망대, 1128m)에 비해 3배 이상 긴 코스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완공 예정

#### ■ 경과

-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양양군이 제시한 사업 계획을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부결
- 2014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조기 추진 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사업 재추진
- 강원도는 지난 13일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신청 예정

#### ■ 문제점

-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217호 '산양' 서식지, 무인카메라 확인
- 향후 산지관광 특구법 등, 규제완화와 산지 난개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 높음

#### ■ 산지(산악)관광특구 법제화 추진중

- 자연공원법·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초지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
- 이미 울산시와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에,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지리산에 '산청·함양 케이블카' 추진 계획 밝힘(함양군에서 '백무동~장터목~중산리 9.3km 구간'을 제시)
- 2014년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허용등을 골자로 함
- 현재 '산지관광 특구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 중이고, 신성범(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의원이 대표 발의를 검토중

### 2-3. 풍력발전단지 -영양&영덕 등

#### ■ 딜레마

- 발전의 '방식'만 자연적이면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가?

#### ■ 개발사업 배경

- 2014년 산림청 산지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의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에 따라 풍력회사의 의도대로 진행가능

#### ■ 문제점

- 산지 '대규모' 풍력발전 -낙동정맥 등 훼손(산양, 담비, 삵, 수달, 매, 수리부엉이, 하늘다람쥐, 박쥐 등 희귀동물 서식처)
- 부대시설 -도로 및 송전시설 건설에 따른 2차 훼손
- 저주파 등 환경영향평가 미포함 평가 항목에 의한 실제 피해 큼
- 대기업에 의한 정부압박 및 이미 완공된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 없이 신규사업 추진

#### ■ 완공사례 -영양맹동산 풍력단지

- 산 능선을 30 m폭으로 밀고 콘크리트 기초위에 풍력발전기 41기 건설
-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45기 건설

### 3. 강복원 & 댐건설 백지화 -4대강, 내성천, 장파천, 하천변 난개발

#### 3-1. 댐건설 백지화

##### ■ 내성천 영주댐 근황

- 1999년 처음 제안시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무산되었던 사업이 4대강 사업과 함께 추진
- 2009년 착공, 2014년 말 완공 후 담수 예정이었으나, 2014년 5월 뒤늦게 문화재 발굴 사실이 알려지며, 담수 일정 불확실해짐
- 내성천은 모래 공급이 끊기며 입자가 거칠어지고 수질이 악화되었음
- 이에따라 하류의 낙동강에도 악영향

##### ■ 2012-2020 댐건설 장기계획에 따라 건설추진중인 댐

수 계 별		총저수 용량 (백만㎥)	사업효과		비 고 (관련 계획)
			용수공급 (백만㎥/년)	홍수조절 (백만㎥)	
소 계(6개소)		404	109	237	
다 목 적 댐	낙동강-장파천 <sup>1)</sup>	57	22	6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09)
	낙동강-대서천	45	30	12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09) 댐건설장기계획('01)
	금 강-지 천	21	27	4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09) 댐건설장기계획('01)
	섬진강-내서천 <sup>2)</sup>	21	30	4	광역 수도정비기본계획('09)
홍 수 조 절 댐	한 강-오대천	90	-	90	한강 유역종합치수계획('09)
	낙동강-임 천 <sup>3)</sup>	170	-	121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09) 댐건설장기계획('07)

1) 타당성조사에서 다양한 대안 검토 후 관계기관 협의 거쳐 추진

2)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반영)

3) 현재 간이에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표 1] 댐건설 후보지(안, 2012-2020 댐건설 장기계획, 2012)

- 위의 후보지는 순서대로 장파천 영양댐, 영덕 대서천 달산댐, 청양 지천 지천댐, 구례 지리산 내서천 피아골댐(내서댐), 평창 오대천 오대천댐, 함양 임천 지리산댐(문정댐) 임
- **영양댐** -영양댐건설반대공동대책위원회 -다수의 재판 진행 중(타당성 조사업체-업무방해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양 경찰-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야콘즙 판매 등 대책마련
- **달산댐** -2014년 9월 국토부 건설계획에 반영, 포항시는 적극찬성, 영덕군은 신중한 모습
- **지천댐** -청양군이 주민들과 함께 반대입장 표명, 그러나 수자원공사, 감사원 등은 내포신도시 등을 근거로 물부족을 주장하며, 지천댐을 건설하고 취·정수장, 수도관 등 설치하는 내용의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압박
- **피아골댐** -2012년 발표된 댐 건설 계획(주민들은 피아골댐이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내서댐이라고 부르는) 직후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댐 건설 계획을 단호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몇 년동안 거론되지 않아 주민들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되었다고 생각. 그러나 2015년 3월8일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정현 국회의원, 한국수자원공사 댐 관계자 등이 피아골을 찾아와 주민들에게 폐기된 줄로만 알고 있던 피아골댐에 대해

설명하고 돌아가면서 논란이 재점화 됨

- **오대천댐** -홍수조절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지역 주민들은 건설계획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리산댐**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 된 댐 중 가장 대규모. 초기 식수댐-남강댐 보조댐-홍수조절용댐으로 용도 변경. 건설을 전제로 목적을 끼워 맞추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2014년 6.4 지방선거를 후 홍준표 지사는 식수댐을 강하게 주장. 2014년 10월 21일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시민대책위 발족. 2015년 2월 3일 함양군은 '문정댐 자체 학술용역을 위한 군민자문단'을 구성(총 10명 중, 찬성·반대 측 각 3명, 중립적 전문가 등 4명)하고, 자체 학술용역 발주

### 3-2. 4대강 모니터링과 재자연화

#### ■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 보도자료에서는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
- 치수 -4대강 주변 홍수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수질 -보와 준설에 의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은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
-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없앴 것은 긍정적이나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식재.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沼)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변화

#### ■ '4대강 재자연화 포럼' 본 보고서 재검토 결과

- 치수효과 -보 설치로 인근의 홍수위는 설치 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 보 수문이 오작동할 경우 극심한 홍수피해 예상. 홍수위 저감은 대규모 준설의 효과. 보는 치수에 방해요인임 -편향적 서술
- 수질 -오염원이 유효하게 줄어들었음에도 보 건설 및 하상 준설로 수질은 악화. 사업 전 저질토는 오염되지 않았음. 즉, 하상 준설도 수질측면에서 불필요한 사업. 성층현상 확인됨. 남조류의 대량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체류시간 증가로 나타남. 즉, 동일한 강우량을 전제할 때 가장 큰 원인은 4대강 사업이며, 향후 체류시간 감소 등의 계획필요성 인정

####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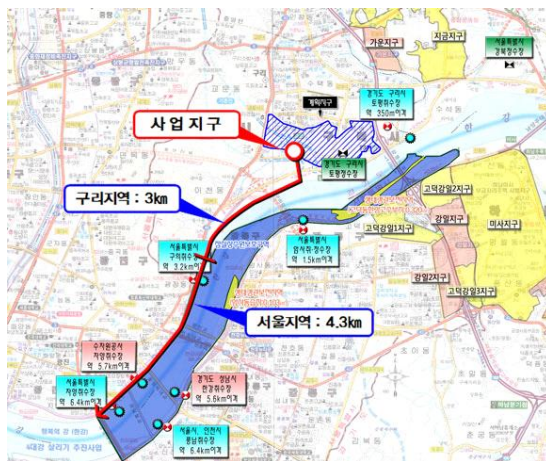
- 분석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4대강 논란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보임
- 아직 해산되지 않은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질의 및 결과 발표 예정
- 녹조 등 수질, 생태계 모니터링 필요
- 꾸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수문 개방 및 궁극적으로는 재자연화 필요성 강조



A detailed map of the area around the 'Business Potential Site' (사업대상지) in Gwangju. The site is highlighted in red. Major roads shown include the Namhae Expressway (남해안고속도로), Jeonnam Expressway 2 (제2남해고속도로), and National Route 2 (국도2호선). Landmarks include Gwangju Airport (김해공항), Gwangju Station (역도강), and various local landmarks like Gwangju City Hall (광역시청) and Gwangju City Hall (광역시청). Distances are marked: 10km to the airport, 5km to the station, and 10km to the city center. Other labels include '지방도69호선', '대저JC', '덕천C', '가락C', '서부신C', '공왕로', '국도2호선', '영지지구', '지방도1047호선', '부산신항', '연인부두', and '암남공원'.



-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그린벨트 해제 안 통과(그린벨트 해제 조건-'외국인 투자신고 지역 지정받고 행자부 중앙투자 용자심사 득한 후 관보 고시', '서울시와 관계 유지', '토지전매 일정기간 제한할 것' 등)
- 완공목표년도: 2020년
- 발주기관 및 예산: 경기도 & 구리시, 사업비 10조원(외국자본 MOU 체결 등)
- 위치 & 규모: 현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 1천 m<sup>2</sup>
- 토지이용계획: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업 2천여 곳이 입주 예상). 주변에는 디자인 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호텔 3곳, 주택 7천558가구 등 계획
- 기타: 서울의 상수원 오염 우려에 따른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히자 7.3 km의 수송관로를 설치해서 상수원 하류(잠실수중보 하단)에 방류하겠다는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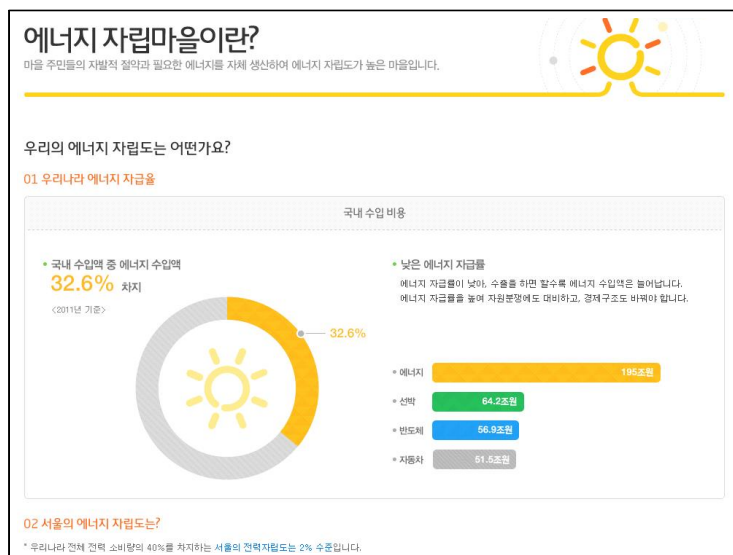


[그림 8] 구리 월드디자인시티의 하수처리수 방류계획(<http://www.nyjtoday.com/>)

## 4. 난개발 방지 & 생태도시 -도시에너지, 미세먼지, 재개발

### 4-1. 도시의 에너지 자립

#### ■ 원전, 산지 풍력발전 등 앞 부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그림 9] 에코구로협동조합의 예(<http://www.ecoguro.co.kr/>)

## ■ 그런 의미에서....

- 지리산 초록배움터의 노동당 소유 태양광발전기(3kW) 판매수입
- 2014년 4월-12월 신재생에너지 회계

4월:	607,030
5월:	412,781
6월:	425,643
7월:	344,023
8월:	323,456
9월:	452,288
10월:	274,076
11월:	273,494
12월:	246,520
-----	
• 6kw 발전 수익:	3,339,311원
• 3kw 발전 수익:	1,669,655원
• 공간이용료:	9개월*10만원=90만원
• 송금할 액수:	약77만원

- 현재, 초록배움터는 해산총회를 갖고 해산했으나, 지금처럼 (황광우님이) 태양광발전 수입을 정기적으로 정산/송금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이나 공간이용료 부담 등을 감안한다면 한전과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향후 녹색위에서 결정 필요한 사항

## 4-2. 재개발 vs. 도시재생

### ■ 개발이 아닌 구조와 기능에 있어 '생태적'인 도시로의 변화 필요



재개발과 도시재생의 차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결과

유형	지자체	대상지역	사업구상(안)
도시경제 기반형 (2)	부산 동구	초량 1236동 (부산역 일대)	부산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한 창조경제 지구 조성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 12동, 우암동, 중앙동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일반 규모 (6)	서울 종로구	송인·창신 123동	뉴타운사업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사업, 봉제공장 (가내수공업) 특성화
	광주 동구	충정동, 동명동, 산수동, 자산동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구도심 상권 활성화
	전북 군산시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조성
	전남 목포시	목원동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백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
	경북 영주시	영주 1, 2동	19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 재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성호동, 오동동	부림시장, 창동예술촌 중심의 문화예술중심도시 재생
	대구 남구	대명 2, 3, 5동	공연소극장 재생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
소 규모 (5)	강원 태백시	통동	정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빈 건물을 활용한 청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활력 창출
	충남 공주시	웅진동, 중학동, 옥룡동	백제왕조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
	전남 순천시	향동, 중앙동	노후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육성·녹화

#### 4-3.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취약계층

##### ■ 미세먼지에 대한 취약 계층에 대한 논의 필요

-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퍼포먼스 -2015년 4월 22일 (사)환경정의는 미세먼지 취약직업군을 위한 행진 캠페인 진행. 자동차와 관련된 미세먼지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버스기사, 집배원 등의 미세먼지 취약직업군 의상을 입고 서울시청 주변 일대를 걷는 코스프레 형식으로 진행
- 미세먼지 취약 연령대 -노인, 어린이 등

##### ■ 소득계층간 환경불평등 문제

-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오염노출로 인해 일부 환경성 질환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음

#### 4-4. 등등등... 무궁무진한 의제들...

- 방사능 식품 -육아위원회와 연계
- 학교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문제

### 5. 고민할거리

##### ■ ‘노동당’의 ‘녹색위원회’는 뭐가 달라야하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720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57200)
- “건설노동자, 세계 최초 '도시환경운동' 주도하다-'시드니 재개발계획' 막아낸 잭 먼디는 누구인가”
- “먼디는 재개발이라는 허울의 뒷전에서, 별다른 대책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저소득층의 비애를 외면하지 않았다. 정부와 개발회사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이 실패하면 가차 없이 '현장 스톱!'과 '건설노동자 전면 파업' 등의 방식으로 강경투쟁에 나섰다.”
- “건설노동자, 그중에서도 철거담당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건물은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이 세계적인 환경운동의 지렛대가 됐다.”